안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

제정 2025. 5.16 조례 제3752호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제2항에 따라 안양시장의 권한 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공공기관"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.
 - 가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
 - 나.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
 - 2. "위탁"이란 법령 또는 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양시장(이하 "시장" 이라 한다)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 - 3. "대행"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이 행하게 하되, 시장의 명의로 그 사무를 수행하고, 책임도 시장에게 귀속되는 것을 말한 다.
 - 4. "수탁기관"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을 말한다.
 - 5. "대행기관"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대행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.
 - 6. "재계약"이란 공공기관에 위탁(대행)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수탁 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.
- 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공공기관 위탁·대행에 관하여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4조(사무의 위탁·대행의 적정성 검토) ① 시장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·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·대행기관(이하 "수탁·대행기관"이라 한다)의 전문성 및 수행 가능성 등 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.
 - ② 시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직접 시행 또는 민간위탁으로 수행하는

것이 적절한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거나, 수탁·대행기관에서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성격의 사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해서는 안 된다.

- 제5조(위탁·대행 심의위원회 설치 등) ① 시장은 위탁·대행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,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관부서에 안양시 공공기관 위탁·대행 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다만, 제6조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 사무의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.
 -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위탁·대행하고자 하는 사무의 소관부서장이 된다.
 -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 외부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.
 - 1. 안양시(이하 "시"라 한다) 소속 4급 이상 공무원
 - 2. 안양시의회(이하 "시의회"라 한다) 의원
 - 3. 대학교수, 변호사, 공인회계사 등 공공기관 위탁 · 대행 분야 관련 전문가
 - 4.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·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 - ⑤ 위원회는 위탁·대행하고자 하는 사무의 소관부서에서 비상설로 구성·운영 하고, 위원의 임기는 회의가 종료되면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.
 -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.
- 제6조(시의회 동의) ① 시장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·대행하려는 때에는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1.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사무
 - 2.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 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
 - 3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탁하는 사

무로 해당 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

- 4.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되는 사무
- 5. 연간 위탁·대행 금액(수탁 및 대행 사무 처리에 드는 관리·운영비를 포함한다)이 1억원 이하인 사무
- 6. 위탁 · 대행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
- 7. 재난, 재해 대응 등 위탁·대행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 이 있는 사무
- 8.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해 위탁·대행이 필요한 사무로 해당 공공기관의 설립 조례·규칙에 규정된 고유사업에 해당하는 사무
- ② 시장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위탁·대행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사무(제1항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다)를 다시 공공기관에 위탁·대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상임위원회 보고를 제1항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로 본다.
- 제7조(동의안)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시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 - 1. 위탁·대행 사무명
 - 2. 위탁·대행 사무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
 - 3. 위탁·대행 사무의 내용
 - 4. 위탁 · 대행 시설 개요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 등)
 - 5. 위탁 · 대행 기간
 - 6.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
 - 7. 제4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
 - 8. 그 밖에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
- 제8조(수탁·대행기관의 선정 기준) 시장은 수탁·대행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.
 - 1. 위탁·대행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·기구·장비·시설 및 기술 수준
 - 2.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처리 실적
 - 3. 수탁 · 대행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
 - 4. 사업 운영의 투명성 등

- 제9조(계약 체결 등)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·대행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 - 1. 수탁 · 대행기관의 명칭 · 소재지
 - 2. 위탁 · 대행의 목적
 - 3. 위탁 · 대행사무 및 그 내용
 - 4. 위탁 · 대행기간
 - 5. 위탁 · 대행 수수료 또는 비용
 - 6. 위탁 · 대행 수수료 또는 비용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
 - 7.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
 - 8. 수탁 · 대행기관의 의무
 - 9.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
 - 10. 지도 · 점검에 관한 사항
 - 11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-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위탁·대행기간은 6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위탁·대행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위탁·대행기간을 6년의 범위에서 계속하여 연장할수 있다.
 - ③ 시장은 시의회 동의와 다르게 위탁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.
 -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·대행계약이 체결되면 수탁·대행기관의 명칭, 사무명, 계약기간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
- 제10조(재계약) ① 시장은 기존 수탁·대행기관과 재계약하려는 경우,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·대행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. 다만, 재계약의 경우에도 제6조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 사무의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.
 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·대행기관과의 재계약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, 최근 위탁·대행기간 동안에 시장이 시행한 제19조에 따른 지도·감독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.
- 제11조(위탁·대행 사무처리지침 등) 시장은 사무를 위탁·대행하는 경우에는 사무처리의 지연,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, 처리기준의 불공정,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하고, 위탁·대행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작성하여 수탁·대행기

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- 제12조(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)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명의와 책임은 수탁·대행기관에 있으며,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.
 - ② 대행사무의 처리에 대한 명의와 책임은 대외적으로 시장에게 있다. 다만, 시장과 대행기관 간의 관계에서는 계약에 따라 대행기관이 책임을 지고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.
- 제13조(수탁·대행기관의 위탁 등 금지) 수탁·대행기관은 위탁·대행사무를 다른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할 수 없다. 다만, 수탁·대행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 위탁·대행사무의 일부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다시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- 제14조(경비의 부담 등) ① 시장은 수탁·대행 기관이 위탁·대행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.
 - 1. 사업계획의 수립, 사전 조사와 용역 등에 소요되는 경비
 - 2.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, 인건비 및 부대 경비
 - 3.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 드는 경비
 - 4.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
 - 5.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
 - ② 제1항에 따라 시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수탁 및 대행 기관은 미리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 전까지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③ 수탁·대행기관은 제2항에 따른 집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 장과 협의해야 한다.
 - ④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수탁·대행기관은 해당 집행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.
 - ⑤ 제1항에 따른 비용은 제6조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.
- 제15조(사용료 등 징수) ① 시장은 위탁·대행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 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해진 사용료·수수료·비용 등을 수탁 및 대행 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.
 - ② 수탁ㆍ대행 기관이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할 때에

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- 제16조(정산 등) ① 수탁·대행 기관은 회계연도가 끝나거나 위탁·대행이 종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하고, 정산결과 집행잔액 및 발생한 이자가 있는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.
 - ② 시장은 매년 주요 재정사업 평가계획에 따라 위탁·대행 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예산편성 과정에 활용하여야 한다.
- 제17조(사무편람) ① 수탁·대행 기관은 업무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 ·대행 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·처리기간·처리절차·처리기준·구비서류 ·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된 사무편람을 갖추어 두어 야 한다.
 - ② 수탁·대행 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제18조(실적보고) 수탁·대행 기관은 위탁·대행을 완료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19조(지도·감독) ① 시장은 위탁·대행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 및 대행 기관을 지도·감독하며,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·대행 기관에 위탁·대행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.
 - ② 시장은 수탁·대행 기관의 지도·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위탁·대행 사무에 대한 서류·시설 등을 검사하도록 할수 있다.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 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
 - ③ 시장은 수탁·대행 기관의 위탁·대행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.
 - 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·대행 기관에 통보하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- 제20조(계약의 해지 등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·대행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.
 - 1. 수탁·대행 기관이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

- 2. 수탁·대행 기관이 위탁·대행사업 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
- 3.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
- 4. 위탁·대행 사무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허위 관련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
- 5.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
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수탁·대행기관에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-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시가 부담한 경비의 환수,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 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제21조(교육 등) ① 시장은 위탁·대행 업무 담당 공무원과 수탁·대행 기관을 대상으로 위탁·대행 사무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 - ② 시장은 위탁·대행 업무 담당 공무원과 수탁·대행 기관을 대상으로 위탁 ·대행 사무처리에 필요한 정보 공유 등을 위한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적용례) ①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위탁· 대행사무부터 적용한다.
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위탁·대행사무로서 이 조례 시행후 그 위탁·대행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공공기관에 위탁·대행하는 경우에는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상임위원회 보고를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로 본다.